

2024 국정감사 자료집 2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약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24.10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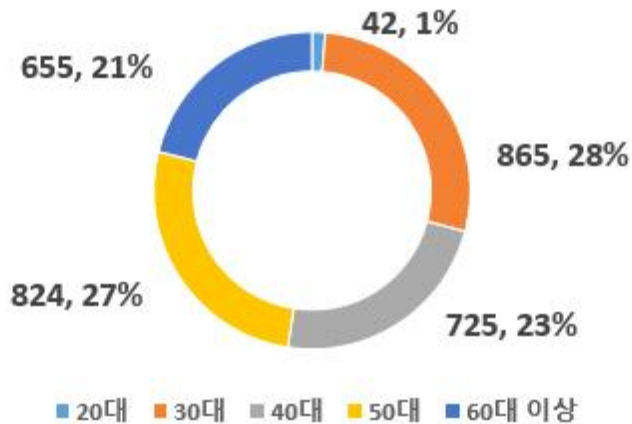
- 부천시(갑)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본 설문은 전국의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2024년 10월 15일 ~ 10월 17일에 걸쳐 실시됨. 형식은 네이버폼을 활용하였고 약사회에 등재된 전국의 개국약사들에게 모바일로 설문을 배포하였음.

1. 설문참여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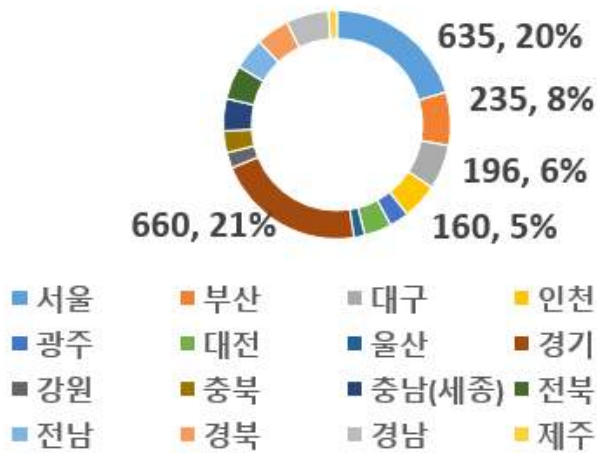
- 본 설문에는 전국에서 총 3,111명의 개국약사가 설문에 답하였다.
이 중 30대가 28%, 50대가 26%, 40대가 23%, 60대 이상이 21%로
각 세대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나 20대의 응답율은 1%에
불과하였다.
- 20대 응답을 저조는 약대교육에 있어 PEET 제도 및 6년제 학제에
따라 연령이 상향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분	빈도수
20대	42
30대	865
40대	725
50대	824
60대 이상	655
계	3,111

2. 설문참여자 개국지역

- 응답자의 개국 지역은 경기지역이 21%, 서울지역이 20%로 나타나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 전체 응답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었고, 부산이 8%, 대구와 경남이 각각 6%, 기타 지역이 39%로 나타나 비교적 전국에서 약사들의 분포에 맞게 설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수
서울	635
부산	235
대구	196
인천	160
광주	86
대전	121
울산	48
경기	660
강원	69
충북	96
충남(세종)	142
전북	149
전남	141
경북	147
경남	189
제주	37
계	3,111

3. 최근 6개월 동안 처방된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수급불안정(품질)에 대한 경험 여부

-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질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3,111명중 7명을 제외한 전원이 그렇다고 답변함에 따라 100%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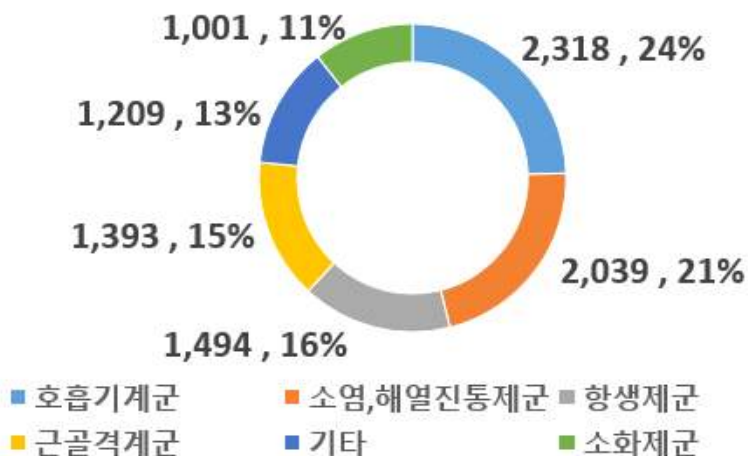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있다	3,104
없다	7
계	3,111

4. 최근 6개월 동안 처방된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수급불안정 (품질)에 대한 경험한 경우 - 약품군별 (중복선택)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내역이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등 소수로 다양한 약품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한 품목군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대책에 있어 전체 의약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분	빈도수
호흡기계군	2,318
소염,해열진통제군	2,039
항생제군	1,494
근골격계군	1,393
기타	1,209
소화제군	1,001

주요 기타 답변 내용
철분제
갑상선
변비약

5. 수급불안정의약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의 원인 (중복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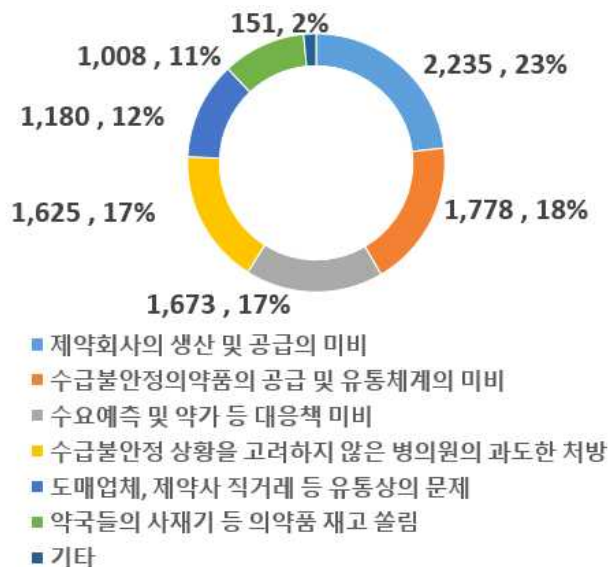
-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23%의 약사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와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의 항목에는 각각 18%, 17%의 답변을 하였다.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을 지적한 답변도 17%에 달하고 있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처방 제한 등의 조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10%였다.

약국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우려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구매력에 따른 약국간 차별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구분	빈도수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의 미비	2,235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	1,77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	1,673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	1,625
도매업체, 제약사 직거래 등 유통상의 문제	1,180
약국들의 사재기 등 의약품 재고 쏠림	1,008
기타	151

주요 기타 답변 내용
사용량약가연동제
특정회사 제품만 품질 / 성분명처방 필수
약가인하 여파로 제약사 미공급
성분명처방 미시행으로 인한 특정제품 쏠림
제약회사가 품질약을 미끼로 영업에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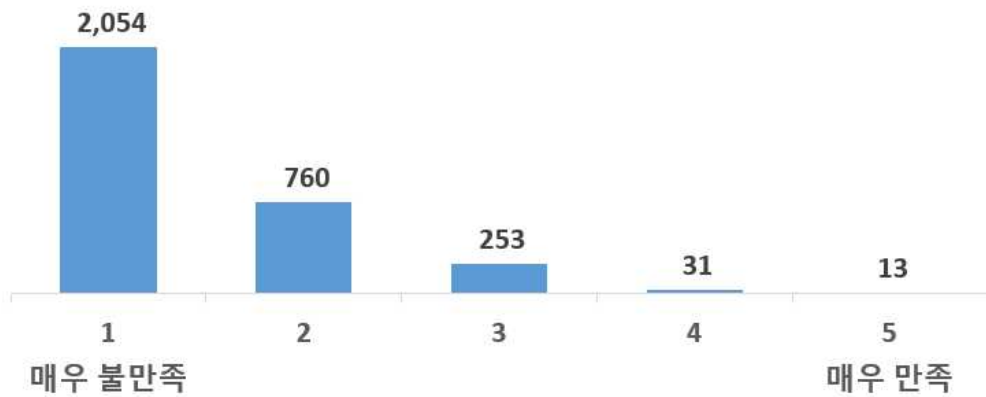
6.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응관련 국회/정부의 활동 및 대응에 대한 만족도

-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응관련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서는 94%의 비율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나왔다.
- 세부적으로 국회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 66%, 불만족 24%,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로 나타나 국회의 대응에 비해서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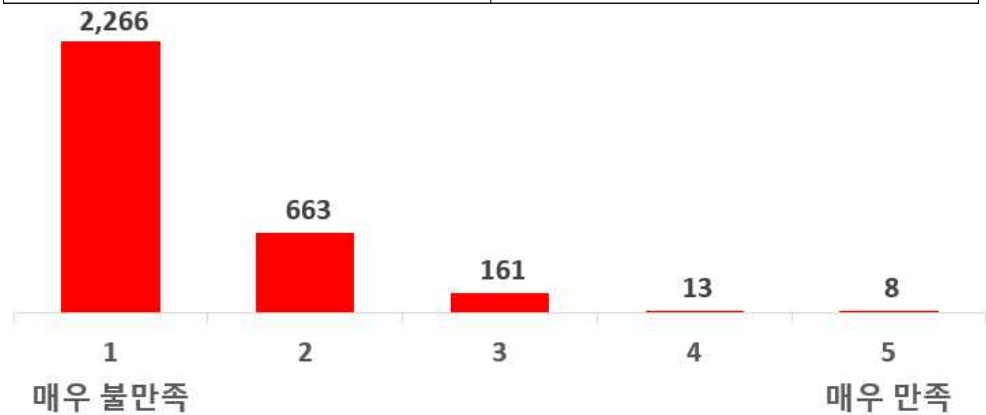
이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수급불안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책을 적시한 법안 통과, 보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등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약사들의 기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복지부 식약처 등 행정당국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약사들이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분적인 약가인상과 약사회를 통한 균등공급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특히 약가인상의 경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고 이에 국회에서도 약가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있다.



국회 대응 및 활동 만족도	빈도수
1 매우불만족	2,054
2	760
3	253
4	31
5 매우만족	13
계	3,111



정부 대응 및 활동 만족도	빈도수
1 매우불만족	2,266
2	663
3	161
4	13
5 매우만족	8
계	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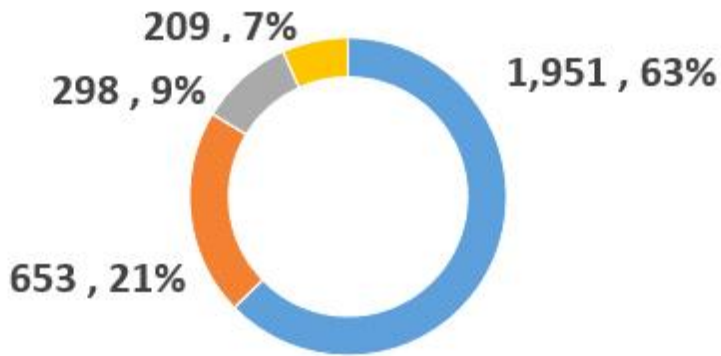
7. 현재의 수급불안정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중복선택)

-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이 63% 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이 21%, INN(국제일반명) 표기가 10%로 그 뒤를 이었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법 개정사항이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시행규칙에 적시되어 있는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조치이다.

다만 수급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대체조제가 대부분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급불안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수급불안정 해소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으로 대체조제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성분명처방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시범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INN(국제일반명) 표기에 있어서는 성분명 처방의 전단계로 기능하여 수급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인 식약처 또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성분명처방
-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 INN(국제일반명)표기
- 기타

구분	빈도수
성분명처방	1,951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653
INN(국제일반명) 표기	298
기타	209
계	3,111

주요 기타 답변 내용
균등분배 매달 시행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제약사 의견 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품절약은 처방이 안되도록 조절
장기품절약 안정공급을 위해 원가상승을 고려한 약가현실화

8. 국회에 대한 제언

-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한 제언을 묻는 설문에는 위에서 제시되었던 성분명처방, INN(국제일반명) 표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의 의견 외에 적극적인 홍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처방 자제 권고,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 제약사 등에 대한 요청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제언
대통령탄핵
성분명처방을 강력히 원한다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병의원에서 처방자제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부광타도
예전만큼 각 제약회사들이 생산량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